

여행 만족도 4위 그친 강원관광, 경쟁력 강화해야

 강원일보 오피니언

강원특별자치도가 지난해 국민들이 가장 많이 방문한 국내 여행지에서 경기도에 이어 2위에 올랐다. 특히 숙박여행에서 강세를 보였다. 도는 국내 숙박여행 횟수 2,171만회를 기록, 전국에서 유일하게 2,000만회 이상 수치를 나타냈다. 2위인 제주(1,338만회)와 비교하더라도 800만회 이상 차이 나는 압도적 1위다.

응답자별로 살펴보면 도는 40대(22.3%), 3인 이상 가구(72%), 가구소득 600만원 이상 고소득자(42.4%) 숙박 관광객들에게 선호도가 높았다. 그러나 높은 인기와 달리 물가 및 관광지 혼잡도 등에서 낮은 평가를 받으며 여행 만족도는 전국 4위에 그쳤다. 제주, 전남, 부산에 뒤졌다. 물가와 관광지 혼잡도의 영향이 컸다. 기념품 등 쇼핑 관련 만족도도 하위권이었다.

이 같은 문제들은 관광자원의 경쟁력이 뛰어나도 ‘다시 찾고 싶은 강원자치도’에 심각한 리스크가 될 수 있다. 관광산업은 여행객의 눈높이에 맞는 상품 개발 등 경영마인드로 접근해야 한다. 천혜의 관광자원만으로 어필하기는 힘들다. 특히 무질서·바가지요금 없는 ‘청정 국민관광지’를 떠올릴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치단체의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스스로 주인의식을 발휘할 때 비로소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훌륭한 관광자원을 갖고 있다고 해도 관광지가 혼잡하고 바가지 상환이 난무한다면 아무도 다시 방문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축제나 콘서트 위주 등의 이벤트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다. 제대로 보고 즐길 수 있는 강원관광으로 도약하기 위한 각오와 노력이 더없이 절실한 때다.

관광은 다양한 분야가 결합한 ‘융복합산업’이다. 강원관광은 겨우 숙박만 충족됐을 뿐이다. 볼거리와 먹을거리가 부족하고 즐길 거리는 더 찾기 어려워 만족도가 매년 떨어지고 있다. 콘텐츠는 풍부하되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미흡하면 관광산업은 언제든지 위기가 닥쳐올 수 있다.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결국 여행객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

구슬이 아무리 많아도 제대로 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법이다. 즐길 거리, 먹거리, 교통, 편의시설 등 각종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보완책이 마련돼야 하는 이유다. 여행객의 만족도가 커지면 새로운 시장인 워케이션 사업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천혜의 자연환경에 더해 관광상품 개발, 관광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강원관광의 매력을 높여야 한다. 그래야 관광산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인구 유입 등도 이룰 수 있다.

출처:강원일보 오피니언

정책제언 II

‘얼마나 늘지 모르는 ‘사라진 아기’... 보호출산제 도입해야

 세계일보 오피니언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사라진 아기’ 숫자가 하루가 멀다고 늘고 있다. 지난달 ‘냉장고 아이 시신’ 사건을 계기로 출생 미신고와 영아 2236명을 전수조사하면서 감춰진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경찰은 어제 출생 미신고 아기 사건 420건을 접수해 400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전날까지 193건이던 숫자가 하루 만에 두 배로 경증 뒀었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이렇게 많은 아기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니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전수조사를 통해 우리 사회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했는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어제까지 전국에서 사망이 확인된 영아만 15명에 이른다. 부산에서는 2015년 2월 출산한 아기를 집 주변 야산에 유기한 친모가 적발됐다.

이 친모는 아이가 생후 8일 만에 집에서 갑자기 숨지자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는데, 사체유기죄 공소시효가 7년이라서 아예 처벌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한다. 청주에선 2016년 아기를 낳은 뒤 인터넷을 통해 제3자에게 넘기는 일까지 벌어졌다.

사회 전체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자칫 문힐 뻔한 이 사건도 보육원에서 20여년간 일한 간호사가 B형간염 접종 기록이 없는 아기들에 대해 의문을 갖고 감사를 청구하면서 알려졌다.

15년 전부터 국회에는 분만을 담당한 의료기관이 지자체에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으나 제대로 논의된 적이 없었다. 이번에 이 문제가 사회 이슈로 떠오르면서 국회는 지난달 30일에야 출생통보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기가 출생기록에서 누락될 가능성은 없어졌지만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출생 신고를 꺼리는 미성년자나 미혼모가 의료기관을 찾지 않고 숨어서 아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예 불법 낙태의 길로 내몰 수도 있다. 산모가 익명으로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호출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어제 범정부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위한 1차 회의가 열린 만큼 도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 양육가정 진료비 부담 덜다!

-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반려동물 인프라 개선 내용 포함, 7월 중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을 마련하여 전략·과제 구체화 추진 -

- 금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과제의 하나로 밝힌(7.4일)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항목*에 대한 부가세 면제가 올해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반려동물의 암 등 중증질환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도록 펫보험 제도를 개선하고, 진료비 게시 의무 항목에 대한 진료비를 조사·공개하게 된다.
 - * 외이염, 결막염, 개 아토피성 피부염, 무릎뼈 안쪽 탈구 등 100여개 질병
-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이어 김건희 여사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필요성 등을 여러 차례 언급**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반려인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정부가 관련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게 되었다.
 - * ‘22.1.20일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경감, 반려동물 용품·훈련 등 서비스 산업 육성 등을 포함하는 동물복지 공약 발표
 - **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에 각별한 관심과 의지를 표명한 바 있음(‘22.6.13일 중앙일보, 서울신문, 월간조선)
- 최근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와 동물의 지위 상승 등으로 펫푸드, 펫테크 등 반려동물 연관산업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반려동물 의료에 대한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 *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추정) : (‘12) 364만 가구 → (‘22) 602만
- 다만, 시장·투자 규모 등 산업 실태 파악이 부족하고, 반려산업에 특화된 제도와 연구·실증 인프라가 부족하여 체계적인 산업 육성에 한계가 있으며,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진료비 부담* 문제와 진료 투명성 부족 등에 대한 개선 요구도 증대하고 있다.
 - * 반려동물 1마리당 월평균 양육비 15만원 중 병원비가 6만원(‘22년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
-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펫푸드·펫보험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반려동물 관련 제품 R&D 지원 및 전문인력 육성 등 제반 인프라 조성을 통해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본격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실제 동물의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다빈도 100개 진료 항목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부가세를 면제하는 한편,
 - 진료비 게시 의무 항목에 대한 진료비 조사·공개를 추진(7월)하고, 내년까지 추진 예정이었던 진료표준화 계획을 금년까지 조기 마무리하여 진료비 투명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 농식품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7월 중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대책’을 마련하여 세부적인 전략과 과제를 구체화하고,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여부 임차인에게 알린다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반환보증(이하 “임대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해 임차인 안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임차인 안내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먼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등록임대사업자가 해당 시·군·구에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임대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 및 사유를 국토교통부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통해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통보*한다.
 - *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임차인이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고, 연락처를 기재한 경우
 -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 이하 HUG)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 가입신청을 철회하거나 가입요건 미비로 승인을 거절하는 경우,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알림메세지(카카오톡)로 발송*한다.(7월말 예정)
 - 종래에는 임대보증 가입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만 임차인에게 통지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가입신청 철회 또는 접수완료 후 가입요건 미비로 임대보증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도 임차인이 즉시 알 수 있게 되어 임차인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개선으로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가입 의무 이행이 확보되고 임차인의 임대보증금반환에 대한 우려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법무부

전자여행허가(K-ETA) 이용자 편의성 개선

- 전자여행허가 유효기간 확대(2년 → 3년) -
- 청소년(17세 이하)과 고령자(65세 이상)는 전자여행허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 -

- 법무부는 무사증입국 가능 국가 국적자가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위해 필요한 전자여행허가(K-ETA)*의 이용자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7월 3일(월)부터 △ 전자여행허가의 유효기간을 확대(2년 → 3년)하고 △ 청소년(17세 이하)과 고령자(65세 이상)는 전자여행허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 무사증입국 가능 국가(112개)의 국적자가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위해 현지 출발 전에 전자여행허가(K-ETA) 홈페이지에 정보를 입력하고 허가를 받는 제도(유효기간 내에서 국내입국 횟수 제한 없이 사용 가능)
- 전자여행허가 유효기간 확대는 시행일 이후 전자여행허가를 신청하는 대상자부터 적용됩니다.
- 전자여행허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청소년(17세 이하)과 고령자(65세 이상)는 사전에 전자여행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입국이 허용되나, 입국신고서 작성 생략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 전자여행허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금번 조치로, 외국인이 한번 전자여행허가를 받으면 더 오랜 기간 동안 우리나라를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게 되고, 특히 청소년, 고령자들은 전자여행허가 없이도 입국이 가능해지므로 이들을 동반한 가족여행객 등의 입국편의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동안 전자여행허가 다국어 지원 서비스를 한국어, 영어 2개 언어에서 일본어 등 6개 언어*를 추가하고, 단체신청 가능 인원도 30명에서 50명으로 늘리는 등 전자여행허가 이용자의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킨 바 있습니다.
 - * 일본어, 태국어, 중국어(번체), 스페인어, 프랑스어, 말레이어
- 법무부는 앞으로도 전자여행허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전자여행허가가 외국인의 입국편의 증진 및 안전한 국경관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외국인 주민 관련 정책의 분권화와 지역맞춤형 정책의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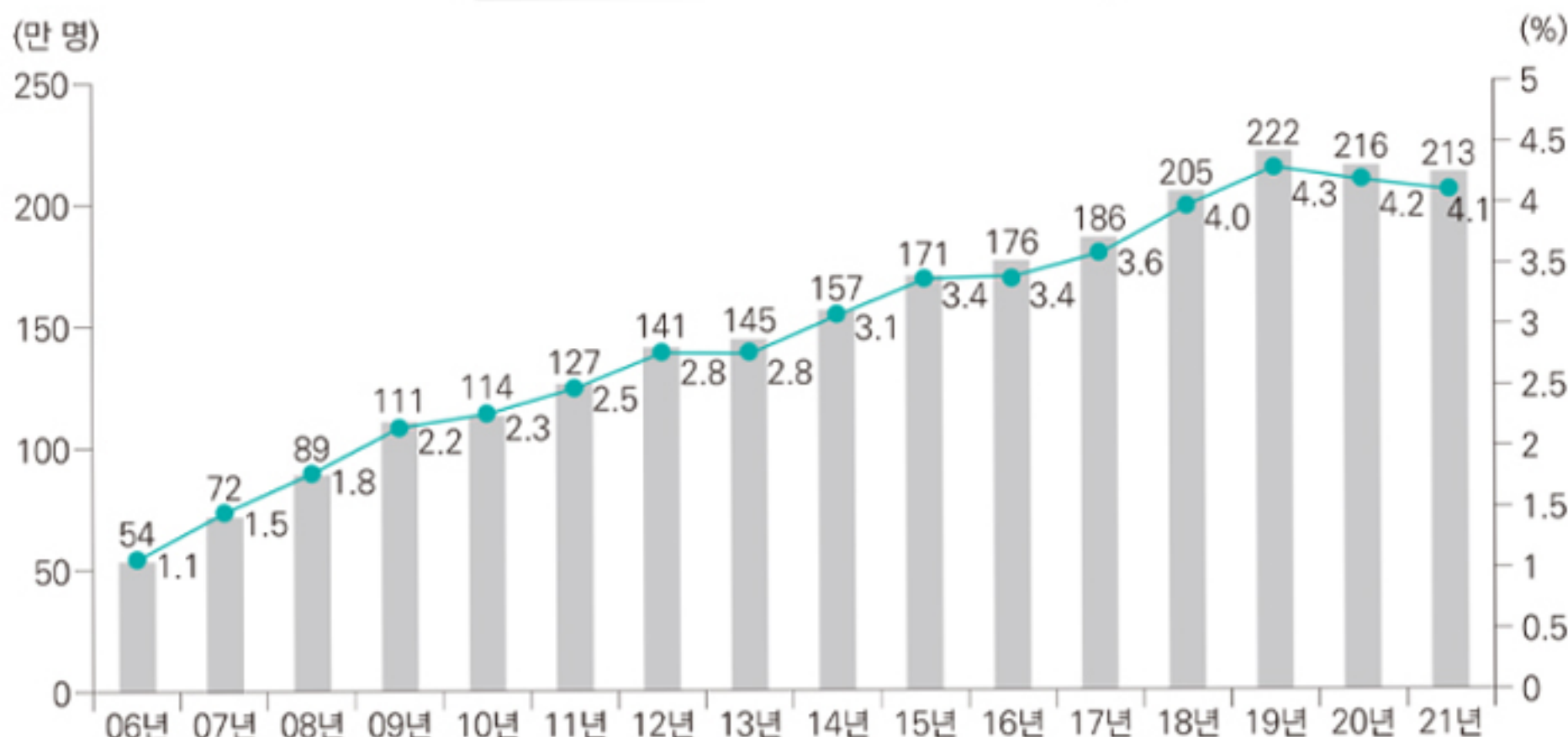
전 대 욱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01. 지역 인구감소 대응에 있어서 외국인 관련 정책의 중요성

지역 인구감소와 주민 및 생활인구로서의 외국인의 비중 증대

- 지역 인구감소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수준에서 생활인구를 구성하는 주요 대상인 외국인에 대한 정책의 중요성이 날로 확대되고 있음
- 행정안전부의 “202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에 따르면, 외국인 주민은 총인구 대비 4.1%(약 213만명, 국적 미취득자 약 165만명)로 최근 15년간 4배가 증가하였으며, 외국인 근로자 및 유학생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증가 추이('06 ~ '21) •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및 이민정책에 대한 중요성 확대

-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인구·관계인구 늘리기 차원에서 외국인 주민·근로자에 대한 인권보호 및 지역정착 등을 위해 지원 조례 및 관련 계획·시책 등을 추진 중임
- 여전히 관련 정책은 중앙부처에 집중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거버넌스 체계의 보조적인 역할에 머물러 있음(조명희 외, 2021:8-16)
- 본 고는 향후 외국인 정책의 분권과 지역맞춤형 정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외국인 정책과 관련된 두 가지 중요한 흐름을 간략히 제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02.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권의 개념과 관련 정책 동향

시민권과 구별되는 주민권의 개념

- 주민권(denizenship)은 시민권(citizenship)에 의한 국민과 체류자격을 얻은 외국인 외에도 지역 내에서 사회경제적 활동을 영위하는 모든 외국인 생활인구에 대한 주민으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포괄하는 개념임
- 따라서 주민권은 법적 체류자격을 얻지 못하고 법과 자치법규로부터 소외된 외국인에 대해 인권보호는 물론, 해당 지역의 주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고 필요한 지원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음
- 특히, 코로나 19 위기상황에서의 마스크·백신 등의 지원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사회적 노력이 지속되면서 이 개념은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었으며, 이를 활용하여 외국인 정책에 있어서 보조자에 머문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적이며 지역특화적인 전략을 기대할 수 있음

외국인 주민에 대한 개념 정립과 지역사회 통합 노력

- 주민권에 관한 연구를 통해 주민권의 개념을 정립함으로써 주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인권을 보호하며 필요한 지원 등을 적절히 추진하여, 지역의 생활인구를 확충하고 지역의 인구감소위기에 대응하는 시도로서의 의의를 지님
- 행정안전부는 2008년 이후 국내 체류 외국인을 「지방자치법」 상 주민으로 보고 있으며, 보다 명확한 개념 정립을 통해 외국인 주민과 다양한 체류자에 대한 포용적·사회통합적 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정동재 외, 2022: 2-4)
- 이를 위하여 주민권에 대한 법적인 개념 정립과 이에 기반한 외국인 주민에 대한 적법한 권리 주체로서의 주민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경주되고 있으며, 관련 법제 및 자치법규의 개선 등에 관한 제언이 제기되고 있음(최영미, 2021: 10-13; 정동재 외, 2022: 218-237)

03.외국인 체류자격의 부여에 있어서 지역맞춤형 정책의 시도

법무부의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의 추진

- 법무부는 지난 '22년 지역사회 인구감소 대응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생산가능인구 확충 등)를 목적으로 우수한 외국인의 유치 및 정착을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실시함
- 즉, 외국인 비자정책 수립에 있어 지자체와의 연계 및 지역사회의 정확한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비자발급을 위해 행안부 지정 89개 인구감소지역을 우선대상으로 지역사회가 원하는 외국인에게 비자를 발급함
- 구체적으로, 지자체장이 추천하는 외국인에게 지역거주 비자 체류자격을 변경을 허용 [지역인재형] 또는 외국국적 동포·가족에게 체류 특례 부여 [동포·가족형]하고 정착지원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하며, 대상 외국인에게 일정기간 거주 및 가족동반 특혜 등을 제공함(법무부 공고 제 2022-237호('22.7.25) 및 제 2022-338호(추가공모, '22.10.18)참조)

-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22~)의 개요 •



법무부 시범사업 지자체 선정, 우수인재와 동포 가족의 지역 정착 **체류 특례 부여**
지자체 지역별 필요 인재 규모 파악 및 정착 지원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의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의 의의

- 동 사업은 법무 행정의 관점에서 합법적으로 입국·체류하는 외국인의 정착을 촉진하는 것은 물론, 외국인 주민에 대한 지역사회 통합 촉진을 통해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지역 인구감소에 대한 외국인 정책 차원의 국가적 대응의 의미를 지님
- 시범사업의 공모는 지역 현장의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지역내 외국인 근로자 및 유학생, 외국국적 동포 등의 지역내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등 외국인 정책에 대한 지방분권 촉진과 지역맞춤형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됨

출처 : 전대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알기쉬운 정책용어



대한민국정부

한 달에 대중교통 이용횟수가 15번을 넘는다면?

알뜰교통카드 플러스

교통비 혜택도 플러스 해보세요.

혜택은? 대중교통요금과 걷는 거리에 따라 마일리지 적립

이동 기준은? 걷거나 자전거로 800m 이상 이동

적립기준은? 대중교통 요금이 2000원 미만이면 최대 250원 적립, 청년/저소득층인 경우 더 많이 적립해드려요.

대중교통요금	2,000원 미만	2,000원 이상 ~3,000원 미만	3,000원 이상
기본 마일리지	최대 250원	최대 350원	최대 450원
만19세~34세	최대 350원	최대 500원	최대 650원
저소득층	최대 700원	최대 900원	최대 1,100원

알기쉬운 정책용어

대한민국정부

이용 방법은?

- 1 알뜰교통카드 발급
→ 알뜰교통카드 앱 설치
- 2 이동 전후, 앱을 켜서 '출발' 또는 '도착' 터치로 이동거리 집계

카드 발급은? 신한, 우리, 하나, 삼성, KB국민, 현대, NH농협, BC(IBK기업은행, 광주은행, 케이뱅크, 바로카드), 캐시비, DGB유페이

카드사별 추가 제공 혜택도 챙기세요!

문의 031-427-4415

미세먼지주의보 발령일, 환경 관련 기념일은
누구나 마일리지 2배 적립

대한민국정부

팝콘과 기념품은 소득공제 NO!

영화관람료도 소득공제 30%

대상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분

한도는?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과 합산해
총 300만 원

문의 1688-0700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www.culture.go.kr/deduction/

알기쉬운 정책용어

대한민국정부

7월에도 찾아왔어요! ‘대한민국 수산대전’

연말까지 이어지는 수산대전, 다음 달도 기대해주세요.

할인 대상은?
고등어, 전복, 가리비, 광어, 우럭, 새우, 멍게 등

어디서, 얼마나?
오프라인 | 2023년 7월6일(목)~26일(수)
롯데마트, 한살림 등에서 최대 50%
온 라 인 | 2023년 7월3일(월)~23일(일)
쓱닷컴, 쿠팡 등에서 최대 69%

대한민국 수산대전 누리집 <https://fsale.kr/>

대한민국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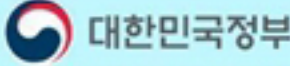
‘해양수산부 지원’ 수산물 쇼핑몰 ‘피쉬세일’ 양식수산물 보양식 특별전

요리대회 수상작 레시피는 덤+

할인 대상은?
전복, 우럭, 광어(넙치), 민물장어, 송어, 향어, 메기 등
양식수산물

어디서, 얼마나?
2023년 7월3일(월)~8월10일(금)
피쉬세일에서 최대 57%

알기쉬운 정책용어



월별 구독 수 제한이 사라져요
전자책 무료 구독 지원 서비스

책 좋아하는 학생, 마음껏 읽으세요!

이용 대상은? 초·중·고 학생·교원, 학교 밖 청소년

이용 기간은? 2023년 7월1일~2024년 6월30일까지

이용 방법은? 예스24 eBook앱이나 PC

학생·교원이라면?
시·도교육청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으로 바로 이용

학교 밖 청소년이라면?
'꿈드림' 또는 '꿈이음사업' 누리집 신청 후 이용

문의 각 학교 혹은 1544-0079